

## 새로운 모습의 전국도서관대회를 위한 제언

이 두 영

(중앙대 교수, 도협 기획발전위원회 위원장)

### 목 차

1. 대회의 주제는 도서관인 전체의 공통된 관심사라야 한다.
2. 대회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이며 先導的이어야 한다.
3. 대회는 관종별대회 또는 주제별 분과회의 형식이라야 한다.
4. 현장과 학계가 적극 참여하는 전국대회라야 한다.
5. 제32회 도서관대회의 의의

최근에 이르러 과거 도서관계의 고질적인 무사안일적 타성에 대한 질책의 소리가 높아가고 또한 도서관계 각부문에 걸쳐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30년이 넘게 매년 계속되어온 도서관대회에 대해서도 그 성격과 의의를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변모되어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대회의 주제는 도서관인 전체의 공통된 관심사라야 한다.

오늘 우리가 전국도서관대회 대회주제의 성격을

논의하기에 앞서 도서관 대회의 기본 취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전국도서관대회는 지금부터 32년전인 1962년 7월 21~22 일 사이에 제1차 대회가 개최된 것을 시초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년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제1차 대회를 처음 개최하게 된 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의 제정공포를 目捷에 두고 전국 도서관인들이一堂에 모여 도서관사업의 제문제를 연구토의하여 합리적인 진흥책을 강구하고져 본대회를 개최한다.”

이어서 제2차 대회부터 제5차 대회에 이르기까지의 대회취지를 보면 서두에 “도서관법의 제정공포를 앞두고(제2차)…” “도서관법 시행을 앞두고(제3회)…” “도서관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제4회 및 5회)…” 로 시작해서 각급 도서관 활동의 당면한 제문제들을 연구협의하고 도서관 사업의 중요성을 관계요로와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정상적인 도서관운동의 진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초기의 전국대회 개최의 목적을 종합해 보면 첫째, 당시 도서관법제정과 시행령공포를 계기로하여 각종 도서관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새롭게 연구협의하고, 도서관의 사회적기여를 위한 도서관인들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場을 마련하려는데 있었다고 분석된다. 둘째, 당시 도서관사업의 중요성을 관계요로와 국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국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6회 대회때의 취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서관인들의 단결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안으로는 전국 각종도서관의 당면문제와 진로를 연구협의하고, 밖으로는 우리 도서관계와 학계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며, 나아가서 도서관사업의 중요성을 관계요로와 국민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이와같이 초기대회가 천명하고 있는 대회취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당시 도서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무하였다는 것과, 국가발전을 위한 도서관진흥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전무하였다는 당시의 처절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듯 사회적 인식이 결여된 불리한 여건 속

에서 당시 도서관인들은 전국대회를 통해 도서관계와 학계의 단합된 힘을 과시하여 대정부 투쟁과 사회적 인식고양의 숙제를 풀어 가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제6회 대회때 결의한 다음의 대정부 건의사항을 보더라도 당시 도서관인들이 얼마나 애써 노력하였는가를 엿볼 수 있다.

- 문교부 도서관행정전담과의 설치
- 사서직원 및 사서교사 T.O.배정
- 공공도서관의 국고보조의 실현
- 사서직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급

지난 32년간 도서관대회에서 논의된 주제들을 종합해 보면 도서관 외적인 정치적 현안문제와 도서관 내적인 당면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외적인 현안문제들에는 주로 도서관법과 시행령, 도서관정책, 도서관행정, 사서직의 권익옹호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포함된다. 한편 도서관 내적인 당면과제로는 도서관 업무와 정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학문적, 실무적 측면에서의 연구협의와 관련한 문제들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회주제가 전국대회의제로서의 가치가 있었는가 또는 대회 참석자들의 관심도는 어떠하였는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도서관 외적인 현안문제들은 그때 그때마다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로서 도서관인 전체의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던 의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 내적인 연구협의를 위한 문제들은 전체 도서관인들이 모인 전국대회에서 토의되어야 할 주제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2년간 전국대회에서 발표된 주제들은 모두 119개 ('도서관문화'에 게재됨)로 이 가운데서 “사서직의 자질문제(제10회),” “국가발전을 위한 도서관정책(제13회),” “사서직의 인사제도문제(제18회),” “도서관전산화(제21회),” “도서관협동체제

(제22회),” “도서관법 개정방향(제23회),” “도서관법개정과 그 이후의 문제(제25회),” “새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제문제(제27회),” “21세기를 향한 도서관정책(제29회),” “도서관행정의 당면과제,” “미래의 도서관(제31회)” 등의 의제들은 전체 도서관인들의 관심사에 해당되는 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주제가 대회의제로 채택된 대회를 제외하고는 발표논문들의 주제내용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더우기 서로 이질적인 내용의 주제발표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발표됨으로써 발표내용에 대한 참석자의 집중도, 관심도 및 토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그 결과 다수의 참석자들이 중도에 대회장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이와같이 도서관대회때마다 눈에 띄일 정도로 나타나는 불성실한 대회참석 태도와 대회분위기가 산만했던 원인은 무엇보다 대회주제 자체가 참석자 전체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한 의제가 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앞으로 도서관대회는 전국의 도서관인들이 참여하는 도서관계 유일의 전국대회라는 점에서 대회의 의제는 전체 도서관인들이 관심을 갖을 수 있는 토착이 대회의 대주제로 채택되어야 한다. 예컨대 (1)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사서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국민적 인식고양, (2) 국가차원에서의 도서관진흥정책 수립방안, (3) 선진국의 새로운 학문적 이론과 응용기술의 도입 및 한국적 적용문제, (4) 한국 도서관계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하는 방안, (5) 사서직의 권익을 옹호하는 문제 등과 같은 의제들은 관중의 구별없이, 직급의 고하와 상관없이, 연령과 성별의 차이없이 참석자 모두가 주의깊게 경청하고, 토론에 적극 참여할 만한 토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대회의 주제는 미래지향적이며 先導的이어야 한다.

오늘날 사회 각부문에 걸쳐 정보화현상이 급격히 확산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도서관은 과거의 전통적인 정보서비스 방법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도서관은 사회에 의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시대적 요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대한 도서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정보사회가 도서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만 한다. 첫째, 오늘날 생산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도서관이 독서량의 과중(reading overload)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알아야 할 정보 가운데서 꼭 알아야 할 정보(relevant information) 만을 입수하기를 원한다. 셋째, 선별되어 입수된 정보는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에 있어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유용한 정보(utility)라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현대인들은 유용한 최신정보를 경쟁적으로 신속하게 입수하기를 원한다. 이와같은 정보사회에 있어서의 이용자들의 요구들은 도서관업무의 핵심이 되는 선별기능(selective mechanism)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criteria)이 되는 것이다. Lancaster는 미래 도서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견한 바 있다.

(1) 현재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의 형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으나 새로운 전자매체 자료의 출현과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의 기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2) 네트워크활동의 확대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비용 대 효과면에서의 향상을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네트워크는 개별 도서관으로 하여금 전국적인 도서관자료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3) 인쇄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될 것이며 차츰 전자매체 형태의 자료로 전환될 것이다.

(4) 현대 과학기술은 정보서비스를 정보요구자의 가정이나 사무실로 직접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용자가 도서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다.

(5) 지방도서관의 중요성이 감소될 것이다. 왜냐하면 정보요구자 개인이 통신망을 통해 전국 어느곳에서나 직접 정보원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며, 또한 이용자 자신이 필요한 정보화일을 스스로 구축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 정보요구자 자신이 전자우편과 같은 온라인 정보유통사회의 일원이 됨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공식커뮤니케이션과 비공식커뮤니케이션의 구분이 모호해 질 것이다.

(7) 새로운 형태의 정보서비스가 계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도서관인들은 이와같이 변화될 수 밖에 없는 미래도서관의 양상을 미리 예측하고, 앞서가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현장과 학계가 갈팡질팡했던 과거의 수동적 자세에서 하루 속히 탈피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자신감과 전문직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도서관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문들이 많이 있다. 이

가운데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부문의 예를 들어 보겠다. 정보기술이란 정보의 수집, 처리, 축적, 검색, 전송, 이용 등 정보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술수단을 총체적으로 의미한다. 즉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실제적 응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위성통신을 포함한 전자통신 및 네트워크기술 등 핵심적인 첨단 자동화기술이 포함된다. 이와같은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문헌정보학분야의 발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유통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이론을 흡수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하는 일은 다른 분야 전공자가 아닌 우리 도서관인들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기록정보의 수집, 조직, 축적, 검색, 전송, 이용과 관련한 부문은 문헌정보학 고유의 학문영역으로 다른 전공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전산학, 경영학, 언어학, 심리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공자들이 우리 연구영역 속에 뛰어들어 나름대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시말해서 정보화사회가 성숙되어가면 갈수록 '정보의 유통관리'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 고유의 전문영역으로만 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른 전공분야에서도 새로운 정보처리기법, 자료조직을 위한 새로운 화일구조, 새로운 축적매체의 이용, 초고속통신기술의 개발, 지능형 정보검색, 자동색인 기법의 개발, 검색용 전자사전, 역동적 시소러스, 자연언어에 의한 이용자 interface, 정보네트워크기술개발 등에 관한 많은 연구논문들이 다른 전공자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정보의 유통관리'와 관련한 모든 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입장이 되지 않는 한,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전문영역은 보관(house of materials)과 운영(management of house)으로 그치고 마는 학문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우리 도서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학문적 위기에 대한 논의는 학회에서는 물론, 오늘과 같은 전국도서관 대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생각한다.

한편 도서관 외적인 정치적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先導的인 의제가 전국대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날 '책의 해' 행사를 경험하면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어야 할 도서관계는 제외되었고 엉뚱하게 출판계가 판을 찢던 한해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또 도서관진흥법 제정 당시에도 신설되는 문화부는 도서관을 반드시 업고 들어가야만 할 상황이었고, 당시 도서관계는 지난날 언지 못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으나 언어내야 할 사안에 대한 일치된 의견도출이 시기를 놓쳤던 관계로 결국 송사리만 건진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또 어느날 갑자기 문제부는 출판계와 뜻이 맞아 별도의 '독서진흥법' 제정을 들고 나왔고, 도서관계는 결국 힘에 밀려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타협하고 말았던 것이다. 또 어느날 갑자기 전직 국무총리, 전직장관, 출판계 사장 등으로 구성된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가 생겨났다. 외국의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대국민 독서운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기능면에서나 전국적 조직면에 있어서나 도서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에 속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회가 우리나라 독서운동의 주체가 되어 버린 불상사는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도서관계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대학도서관평가기준의 문제도 그렇다. 대학평가의 문제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평가기준을 만드느라고 오랜 동안 고심해 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대학도서관평가기준이 확정되기 이전에 오늘과 같은 우리의 목소리가 벌써 나왔어야 했고, 사전에 무엇인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도서관계는 언제나 그러했듯이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고, 특히 도서관계가 소외되었다는데 더욱 흥분했고, 흥분된 목소리는 이미 때가 지났기 때문에 메아리조차 없는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고 말았던 많은 사안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도서관인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우리 도서관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사안들이 물밑 어느 곳에서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는 관계요로의 첩보망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안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도서관계의 합일된 목소리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는 민첩성이 요구된다. 또한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설득력과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타협의 기술에도 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지혜와 수단을 동원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에 전체도서관인들의 합일된 의견의 도출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대회의 중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당면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일, 해결방안에 대한 합일점을 모색하는 일, 도서관발전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검토하는 일, 정부시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일, 우리의 단결된 힘을 관계요로와 국민에게 과시하는

일, 이러한 사안들이 사전에 검토되고, 문제의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전국대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 대회는 관종별대회 또는 주제별 분과회의 형식이 라야 한다.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방안에 대한 합일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의 회의형식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그때 그때 우리 도서관계가 당면한 정치적 현안문제나 도서관발전을 위한 당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회의형식이 전국대회다운 특성에 알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도서관법 개정문제, 도서관정책, 사서직의 직급문제, 도서관행정의 2원화 문제, 독서운동의 주제 등과 같은 정치적 현안문제들은 관종별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처방안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해결방안에 대한 관종별 견해를 명확하게 개진하고, 관종별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체도서관인이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회의형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대회의 회의형식은 의제에 따라 다음 두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국대회의 의제에 대한 기본관념이 관종별로 다를 수 있고, 해결방안에 대한 시각이 관종별로 다를 수 있는 현안문제들은 관종별대회형식을 채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둘째, 전국대회의 의제가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당면 과제에 대한 협의와 관련한 경우, 의제의 주제에 따라 주제별 분과회의 형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

과별회의는 분과별 주제에 따라 주제관련 업무담당자, 주제에 특별히 관심있는자, 전공과 관련된 교수 및 대학원생들이 각각의 분과회의에 참석함으로써 공통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주제발표, 토론, 결론 및 종합토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국대회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기의 도서관대회는 ‘(관종별)대회’로 명칭하여 대회기간동안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토픽을 의제로한 관종별대회로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던것이 제 10 회(1971)때부터 대회참석자 모두를 한장소에 모아놓고 여러개의 주제발표를 연속해서 듣도록 하는 전체회의형식으로 바뀌면서부터 전국대회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진 것으로 안다.

근래에 이르러 도서관대회에 대한 대다수 도서관인들의 이미지는 내용면에 있어서 상당부분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매년 그러했듯이 전국대회의 공문이 각 기관에 접수되면, 대회주제에 따라 관련업무 담당자나 관심있는 직원이 대회참석자로 선발되기 보다는 연중 휴가보상처럼 주로 상급자들에게 대회참석의 기회가 주어져 왔거나, 좀 더 민주적인 기관에서는 매년 돌아가는 순서에 따라 참석자를 선발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되어 왔던 것이다. 3일간의 출장비를 타서 대회 첫날 등록하고, 대회참석 증거 자료로 대회유인물을 챙기고, 주제발표 시간에는 발표장 밖의 로비에서 오랫동안 만난 동료들과 담소하고, 대회일정과는 상관없이 적당한 시기에 삼삼오오 단 짝들과 함께 대회장을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다. 이렇듯 무성의하고 어수선한 대회장 분위기 속에서 그때 그때 우리 도서관계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한 합일점과 최선의 대처방안이 과연 모색될 수 있었겠는가를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전국도서관대회는 지금까지의 전체회의 형식보다는 대회의 의제에 따라 관종별대회 또는 주제별 분과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4. 현장과 학계가 적극 참여하는 전국대회라야 한다.

전국도서관대회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대회참석자의 소속여하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전체 도서관인의 구성은 크게 도서관계와 학계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도서관대회가 전국대회의 성격을 갖추고 전국대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계와 학계 모두가 참여하는 대회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제1차 도서관대회의 대회취지를 보면 “...전국 도서관인들이一堂에 모여 도서관사업의 제문제를 연구토의하여...” 라고 밝히면서 전체 도서관인들의 참여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6회 대회취지에서는 “안으로는 전국 각종 도서관의 당면문제와 진로를 연구협의하고, 밖으로는 우리 도서관계와 학계의 단결된 힘을 과시하며...”라고 밝히면서 ‘학계’의 참여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서관대회는 전체도서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외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내적으로는 도서관의 당면문제를 연구협의하는 전국대회라는 점에서 도서관계와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지난 32년간의 전국대회 참석자들은 도서관현장의 실무자들이 거의 전부였고, 학계의 참여도는 지나칠 정도로 저조하였다는 사실은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까지 학계의 대회참여가 일관되게 저조했던 사실에 대해 그 원인을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초기 10

년간의 도서관대회(1962-1972)에는 시기적으로 학계의 참여가 저조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도서관학 교육이 처음 시작된 시기로 (연세대: 1957; 이화여대: 1959; 중앙대: 1962; 성대: 1964) 학계자체의 기반담기에 여념이 없었던 시기가 볼 수 있다. 그 이후(1972-현재)로 학계의 대회참여가 저조했던 원인은 다음 세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도서관대회를 주관하는 도서관협회 자체가 협회사업을 일관되게 관종별 도서관 위주로 계획하여 왔고, 또한 협회자체도 학계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계를 협회로 끌어드리려는 의지도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러한 상황에서 학계는 별도로 한국도서관학회(1970), 한국도서관정보학회(1974), 한국정보관리학회(1984), 서지학회(1985)를 각각 설립하면서 학계는 학회를 중심으로한 활동이 점차 활발해 졌고, 한편 도서관협회의와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된 것이다. 셋째는 도서관계와 학계가 서로를 경원하는 의식의 문제로 해석된다. 이러한 전통적인 감정은 사서직과 교수직과의 직업 의식의 차이, 또는 둘사이의 어떤 경쟁의식 같은데서 비롯된 것이라 풀이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간에 학계와 도서관현장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학계와 도서관협회와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눈에 뜨일만큼 학계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에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도서관계와 학계의 보다 밀착된 결속을 위한 학계의 노력을 먼저 촉구하고자 한다.

문헌정보학은 학문적으로 순수과학적인 특성과 응용과학적인 특성을 함께 갖고 있다 (Taylor). 연구영역은 크게 전문영역(응용적, 실무적), 이론영역(기초)과 공학영역으로 구분된다(Saracevic). 또한

문헌정보학 교과목에 포함되어야 할 학문 영역으로는 (1) 지식커뮤니케이션 (2) 정보원 (3) 정보의 축적과 검색이론 (4) 정보검색 시스템 (5) 정보의 배포 (6) 경영 (7) 연구방법론 (8) 끝으로 정보의 생산, 수집, 축적, 검색, 전송, 경영 등의 각 영역마다 필요로 되는 기술공학의 응용(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등 실무에 대비하기 위한 과목들이 많이 있다.

이와 같이 문헌정보학 교육은 도서관현장에서의 실무와 직결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은 전통적으로 교과목에 도서관실습이 있고, 자료조직 및 검색시스템 실습을 위한 실습실이 있고, 외국의 경우 박사과정 입학조건으로 2년 내지 3년간의 전문사서로서의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현장은 새로운 이론과 기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대학쪽에서는 실제 응용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새로운 정보기술의 응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같이 문헌정보학 교육은 이론과 실체가 맞물릴 수 있도록 현장과의 feedback 사이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때 진정한 산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계는 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한 도서관계의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정보과학자협회, Aslib, 정보관리학회, 도서관협회 등 4개 전문단체를 통합하려는 제의가 나오고 있다(Wilfred Saunders 1989). 미국에서는 미국정보학회와 특수도서관협회를 합병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실패한 역사가 있다. 이와같은 노력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 문헌정보학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도서관 현장과 학계와의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

다.

## 5. 제32회 전국대회의 의의

오늘 제32회 전국도서관대회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회로 도약하기 위한 협회측의 노력이 뚜렷하게 엿보이는 대회라 하겠다. 저는 오늘의 대회를 다음과 같이 기획하면서 오늘대회에 기여하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첫째, 전국대회의 의제선정에 있어서 최근 전체 도서관인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3개의 토픽을 채택하였다. 이 가운데서 ‘독서새물결운동추진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문제와 ‘대학도서관평가기준’에 관한 문제는 도서관 외적인 현안문제로서 오늘 대회를 통해 전체 도서관인들의 합일된 대처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국십진분류표’의 개정에 관한 의제는 도서관 내적인 당면과제로서 개정안에 대한 전체 도서관인들의 의견이 오늘 대회에서 종합되어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오늘 대회에서 논의될 3가지 의제는 주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독서운동’문제와, 대학도서관의 관심사인 ‘대학도서관평가기준’문제와 관중을 초월하여 관심을 갖을 수 있는 ‘한국십진분류표 개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의제에 따른 분과회의의 형식을 채택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셋째, 각 분과회의는 발제에 해당하는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자의 발표와 함께 발제자가 토론의 사회를 담당하는 전통적인 분과회의의 방식에 따르고 있다.

넷째, 각 분과회의의 다음날 정식으로 종합토의시간을 갖고, 각 분과회의의 결과를 보고하고 결론을 맺



는 전국대회다운 대회를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대회를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시킨

오늘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이와같은 발전적인 협회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여러분의 납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 17조 · 제53조  
동법시행령  
제 21조  
동법시행규칙  
제 9~11조

**납본은 문화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 납본된 자료는 국가문헌으로 영구히 보존됩니다.
- 납본된 자료는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제공됩니다.
- 납본된 자료는 우리의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데도 활용됩니다.

**납본은 법으로 규정된 제작자의 의무입니다.**

- 누구나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납본을 하여야 합니다.
- 납본한 자료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드립니다.
- 납본을 하지 않을 경우 가액의 최고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발행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합니다.**

- 납본대상자료  
도서, 연속간행물, 음반, 비디오, 기타 창작물(지도, 슬라이드, 전산화자료, 마이크로형태물 등)
- 납본시기 및 부수  
발행일,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2부
- 납본처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 60-1(137-702)  
전화 (02)537-9648